

투데이 칼럼

생포 북한군 문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 있는 북한군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군, 북한군 그리고 용병 등 셋으로 나뉜다. 생포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인식표(신분증)를 갖고 있어 국제 관습법상 러시아군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분인 소속을 '북한 정찰총국'으로 밝히고 △러시아가 자국 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외교적 압박 우려 때문에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 아니다. 국제 규약으로는 '생포'가 전선에서 발견된 외국군이다. 국제 협약상 용병으로 인정하려면 사적 이익을 얻음 목적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세 가지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 러시아와 북한 측은 본인들의 입장 표명 없이도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러시아 군으로 여겨주길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론전에 능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본인의 SNS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조직(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포로 교환'을 협상할 당사자는 러시아지만, 이들의 신병 문제를 러시아가 아닌 북한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생포한 북한군을 공개해 국제 사회에 북한 참전 사실을 확인시키고, 추가 파병을 막는 '다목적 카드'로 쓴 셈이다.

사실 포로 영상을 공개하는 건 제네바 협약 13조 위반(전쟁 포로는 항상 보호돼야 하며, 폭력이나 위협 행위,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이라 뻔뻔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아가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정을 덧붙여야 한다. 첫째 이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될 때이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이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다. 그럼에도 전쟁 포로가 되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본국(러시아 혹은 북한) 송환이 원칙이다. 여기서 인도적 구호 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개입할 수 있다.

ICRC 규정은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으면 송환 의무의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독재와 인권 탄압 국가이기 때문에, '본국 송환 원칙'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근거로 '북한군은 원하는 나라로 보내준다'라는 합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맺어진다면 국내 송환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이들이 전쟁 포로로 끝내 인

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은 국제법상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되고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라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한국행을 강하게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끼어들 틈이 생기게 된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적용해 국내로 데려오는 방법이다. △헌법상 한국 국민인 점 △북한 정권이 참전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속인 점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상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우크라이나와 협상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

엄연히 '범죄인'으로 데려오는 만큼, 한국에서 유·무죄 선고 등 형식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전쟁 범죄 공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생포된 북한 군인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행을 선택할까.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잔인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 복 규

논설위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가자지구 돌아온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가자지구 칸유니스에 도착해 군중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에 따라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풀어줬다.

트뤼도 美수입품 226조원에 25% 보복관세 부과 발표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연설하고 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1550억 달러(226조385억원) 상당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

유명인 프로파일러 법정 구속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알려졌던 전직 경찰관이 성추행 및 민간 자격증 관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프로파일러(profiler)란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다.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투입된다.

최근 전주지법은 강제추행과 자격기분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어느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최면 심리학 민간 학회에서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자격기분법 위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경찰관은 이에 맞서 피해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여성들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민간 자격증, 학회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지적했다. 민간자격증 발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인정했다.

태양광 의혹 수사 확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이 또 군산시를 압수수색했다. 태양광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퇴직 공무원과 연관성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검찰이 의심하는 유착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신재생 에너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군산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 대상은 새만금 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 안전건설국장실 등 세 곳이다.

2년 전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이 근무한 부서들이다.

검찰은 태양광 사업 등 인허가와 계약을 맡았던 퇴직 공무원과 비리 의혹 사이 연결 고리를 의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해서 없으니 개인적 사건에 대해 묻는 건지, 신시도 개발도 그렇고..."라고 말했다.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는 2023년 감사원 수사 의뢰로 본격화됐다.

검찰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시공업체 선정 당시 자격을 못 갖춘 곳과 계약하도록 군산시가 특혜를 줬다며 1년 반 넘게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수상 태양광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업체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어느 의원을 지난달 기소했다. 마을 태양광으로 추진한 어은리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해당 의원 전 보좌관과 어느 브로커가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상황이다.

퇴직 공무원은 해당 의혹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계약이나 PF는 시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뒷선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개인적 사건에 대해 묻는 건지, 신시도 개발도 그렇고..."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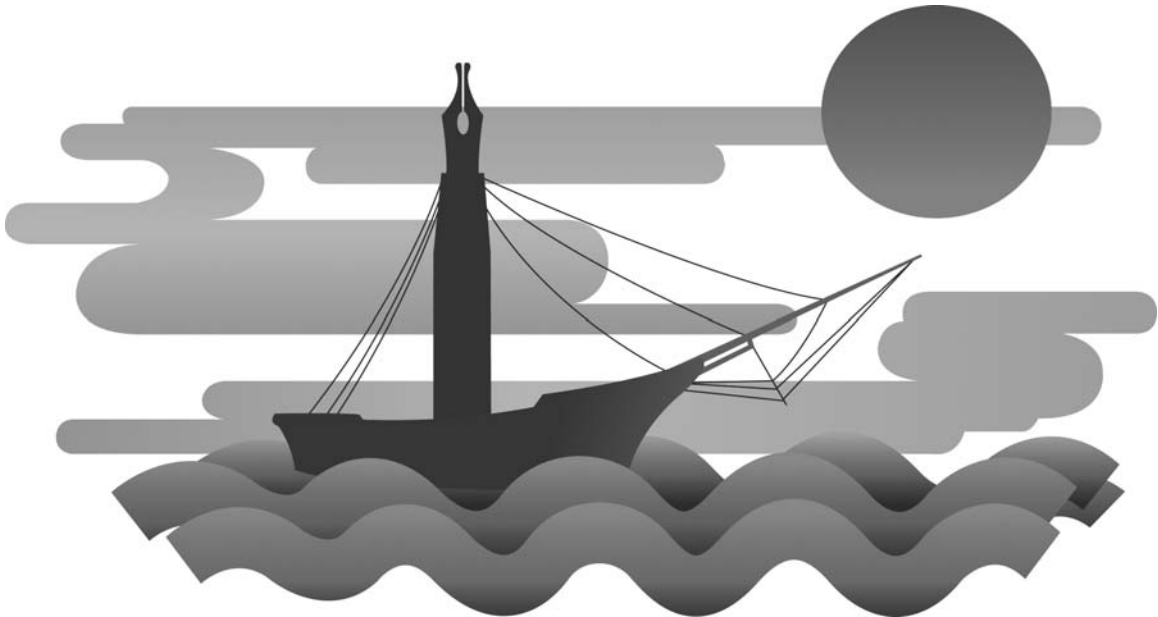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